



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2007년 4월 초 DDA 협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 -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연구위원 (jksuh@kiep.go.kr, Tel; 3460-1156)
박지현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Tel; 3460-1136)

주요 내용

- ▣ 2007년 1월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소규모 각료 회의에서 WTO의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DDA를 공식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DDA 협상은 2007년 2월 중 공식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4월 초까지 세부원칙(modality)을 합의·도출하기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과 함께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절충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 향후 DDA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동시에 가능함.
 - 낙관적 전망은 2007년 4월 초 세부원칙이 도출되고(최소한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 도출), 이를 근거로 오는 6월 말로 종료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갱신되어 2007년 12월 또는 2008년 초 DDA가 종결된다는 것임.
 - 반면 비관적 전망은 2007년 4월 초 주요국간의 정치적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고, DDA는 향후 2~3년의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용임.
 - 결국 DDA 협상은 2007년 4월초가 향후 DDA를 결정짓게 될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 4개국(미국, EU, 브라질, 인도)의 정치적 타결의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임.
- ▣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초까지의 집중적인 DDA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정치적 이해절충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주요 의제별 핵심 쟁점사항에 관하여 정교한 세부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임.

1. 서론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는 5년간의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 감축과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를 놓고 G6(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간 입장절충에 실패하여 지난 2006년 7월 중단되었음.
-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제네바 차원에서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 비공식 접촉을 계속해온 주요 그룹 협상이 표면화되었음.
-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2007년 1월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의 DDA 재개 합의로 이어져 DDA 협상은 공식 재개를 눈앞에 두고 있음.
 - DDA 협상은 늦어도 2007년 2월 중 공식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¹⁾ 2007년 12월 또는 2008년 초 DDA 종결을 목표로 2007년 4월 초까지 세부원칙(modality)을 합의·도출하고자 향후 약 2개월간의 집중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됨.

2. DDA 협상의 최근 동향

가. DDA 협상 중단 선언 이후 2006년 말까지

- DDA 중단은 표면적으로 농업분야에서 미국과 EU의 대립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실제 농업이외 협상분야에서도 회원국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은 원인이었음.
- 농업분야에서의 무역왜곡 보조금의 감축 문제를 놓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미국으로 인하여 주요 6개국 각료회의가 결렬된 것은 사실임.

1) 이미 2007년 1월 중에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와 서비스분야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농업분야 협상은 2006년 10월부터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복수국간 협의(fireside chat)를 계속해왔음. 이에 따라 DDA 협상은 사실상 재개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그룹에서 관세감축공식과 개도국우대 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서비스분야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DDA 중단 이후 2006년 말까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DD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음.

- 하나는 라미 사무총장의 비공식 개별접촉으로, DDA 중단 이후 라미 사무총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과 인도, 브라질 등을 방문하여 핵심 쟁점에 대한 이들 국가간 타협 가능성을 모색해왔음.

- 다른 하나는 제네바 차원에서의 주요 그룹별 활동으로, 주요 협상그룹 의장은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현지 대사들 위주의 비공식 접촉을 전개해왔으며, 때로는 핵심 쟁점에 관한 타협방향을 가설로 제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비공식 접촉 결과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으로 나타났으며,²⁾ 결국 2007년 1월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주요국 각료들의 DDA 재개 합의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DDA 중단 이후 2006년 12월까지 DDA 움직임은 ‘은밀한 외교적 접촉(quiet diplomacy)’으로 표현할 수 있음.

- 비록 이 기간에 DDA 공식 협상이 열린 것은 아니지만 라미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주요국 각료들은 서로 상대방 수도를 오가며, DDA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서로의 입장절충 가능성을 은밀히 타진하였음.

- 한편 제네바 차원에서도 DDA의 핵심인 농업분야는 팔코너(Falconer) 의장의 주도 아래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복수국가 협의(fireside chat)를 가졌음.

- 복수국가간 협의에서는 G6를 포함한 약 20여 개 회원국의 현지 대사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타협안이 논의되었으며, 횡수를 거듭할수록 회원국의 참여도가 높아져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협상이 전개되었음.

2) 라미 사무총장은 2006년 11월 16일 임시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소집하고, DDA 중단 이후 지금까지 자신과 개별협상그룹의장이 진행해온 협의 결과를 다자화(multilateralization)하는데 회원국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DDA 정상화를 표명하였음.

나. 삼각 쟁점³⁾에 대한 주요국 입장

1) 농업분야 시장접근(관세감축과 민감품목)

- 미국과 호주 등 농산물 수출 선진국과 브라질과 인도 등 G20은 농산물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을 주장하며 EU를 압박하고 있음.
- 미국은 관세구간별로 60~90%의 감축을 제안하면서 EU는 적어도 평균 66%는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 EU는 관세구간별로 35~60% 감축률을 제안하면서 평균 41% 감축을 제시하였음. 한편 브라질과 인도가 이끄는 G20은 미국과 EU의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별로 45~75% 감축을 제안하면서 평균 54% 감축을 제시하였음.
- 관세감축공식 적용에 있어 부분적 예외를 인정받는 민감품목의 수에 있어서도 미국과 G20은 농산물 관세라인의 1%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EU는 8%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이가 크게 나타남.
- 지난 2006년 7월 G6 각료회의에서 EU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G20 제안보다 약간 낮은 평균 51% 감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대신 미국도 무역왜곡보조금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음.
-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EU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각료회의는 결렬되고 결국 DDA 중단으로 이어졌음.

2) 농업분야 무역왜곡보조금 감축

- 농산물 시장접근에서는 미국과 G20이 EU를 압박하고 있지만 농산물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금 감축은 정반대의 상황임.
- 미국은 당초 제안(2005년 10월)에서 무역왜곡보조금 총액을 477억 달러에서 60% 감축하여 225억 달러까지 줄이겠다고 제안하였음. 그러나 EU는 당초제안에서 190억 달러까지, G20은 120억 달러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3) DDA의 삼각 쟁점이란 농업과 NAMA에서의 핵심 쟁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에서 ① 농산물 시장접근(관세감축, 민감품목, 특별품목) ② 농업보조금 감축, 그리고 NAMA에서는 ③ 시장접근(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신축성)을 말함. 이들 쟁점을 놓고 미국과 EU, G20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미국은 농산물 시장접근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가 없는 한 무역왜곡보조금의 추가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 2006년 7월 DDA 중단 직전에 개최된 G6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EU의 관세감축률 상향 조정 제안(41→51%)에도 불구하고, EU의 새로운 제안이 여전히 미국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개도국에게만 특별히 허용된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으로 인해 개도국 농산물 시장의 실질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EU와 G20의 무역왜곡보조금 감축 요구를 거부함.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에서 관세감축공식과 개도국 신축성

- 비농산물 관세감축공식은 지난 2006년 6월 2차 의장초안(2006. 6. 22)에서 스위스공식을 적용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적용계수를 놓고 선진국들은 선진국 8~10, 개도국 15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 10 이하, 개도국 30 이상을 주장하고 있음.
-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스위스공식에 적용될 계수(관세상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로 선진국은 10, 개도국은 15를 제안하였음. 그러나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은 선진국은 10이하, 개도국은 최소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최근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는 선진국 10이하, 개도국 20~25 수준이라는 데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임.
- 다만 관세감축공식은 개도국 신축성 조항(para 8)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스위스공식의 개도국 적용계수와 개도국의 신축성 부여를 연계시켜 개도국 시장의 실질적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개도국 적용계수에 추가하여 개도국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다. 주요 4개국(미국, EU, 브라질, 인도)간 타협 가능성

1) 삼각 쟁점에 대해 제시된 타협안

- 4) 개도국 신축성은 2004년 7월 세부원칙 기본골격(7월 패키지)에 언급된 내용으로 다음의 (a)와 (b) 두 가지의 신축성을 개도국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a) 최대 10%까지 공식적용미만의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이때 적용되는 감축률은 공식 적용감축률의 50%는 되어야 하며, 회원국 총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b) 예외적으로 최대 5%까지는 양허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때 적용되는 미양허품목의 수는 회원국 총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삼각 쟁점은 DDA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는 미국, EU, G20의 핵심 이해와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각 세력간에 쟁점별로 서로 공세적 입장과 수세적 입장이 얽혀 있어 DDA 전체의 합의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이에 따라 라미 사무총장도 DDA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06년 7월 주요국간 삼각 쟁점의 타협을 위해 20-20-20 안을 제시하여 타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2006년 9월 호주가 소위 5+5 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음.
 - 라미 사무총장의 20-20-20 제안이란 EU가 농산물 평균 관세감축률을 20% 상향조정하고(41→61%), 대신 미국도 무역왜곡보조총액을 200억 (20 billion) 달러 이하로 감축하며(225억 달러→200억 달러 이하), G20도 NAMA에서 개도국의 스위스공식 적용계수를 20으로 하자는 안을 말함.
 - 호주의 5+5 제안은 미국이 무역왜곡보조금을 50억 (5 billion) 달러 더 감축하고(225억 달러→175억 달러), 대신 EU는 평균 관세감축률을 G20의 54%보다 5% 올린 59%로 하자는 것임.
- 한편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2006년 11월 복수국간 협의에서 EU의 평균 관세감축률을 60%로 하고, 민감품목 및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진정한 시장접근을 조건으로 미국의 무역왜곡보조 총액을 150억 달러로 감축하자는 가설(working hypothesis)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팔코너 의장의 가설은 기존 20-20-20 제안이나 5+5 제안보다 DDA의 기대수준을 높여 미국측 입장에 다소 편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최근의 전개

- DDA 중단 이후 비공식 접촉을 계속해온 미국과 EU는 2007년 1월 농업분야 주요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장 차이를 좁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⁵⁾ 비록 서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절충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 시장접근과 관련해서 EU는 농산물 평균 관세감축률을 기존 51%에서 54%까지 상향조정하고, 대신 미국도 한발 양보하여 기존 66% 주장에서 60%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5) *Washington Trade Daily*(2007년 1월 9일자); *Inside US Trade*(2007년 1월 12일자).

- 민감품목의 수도 4% 안팎이 언급되고 있으며, 민감품목의 TRQ 증량도 EU가 일부 양보하여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증량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증량 폭도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상당 수준 고려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추측됨.
 - 한편 농업보조금에서는 미국이 무역왜곡보조금 총액을 기존 225억 달러까지 줄인다는 안에서 약 50억 달러 추가 감축하여 170억 달러까지 줄이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이러한 미국과 EU간 입장 접근 내용이 다자화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음.
- 첫째, 미국과 EU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임. 농산물 평균 관세감축률에 있어서 EU는 54%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60% 이하는 어렵다는 입장임. 다만 미국은 평균 감축률 자체보다는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므로, 핵심 품목에 대한 양자협상을 통해 미국과 EU간 합의 도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예를 들어 민감품목의 수나 민감품목의 TRQ 증량을 통한 합의).
 - 둘째, 미국이 무역왜곡보조금을 170억 달러까지 감축하는 안에 설령 EU가 동의한다고 해도 G20이 주장하는 120억 달러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음. 따라서 미국과 EU가 G20을 이끌고 있는 브라질과 인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임. 다만 최근 브라질이 DDA의 지체가 개도국의 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신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도는 농업분야 개도국 특별품목과 관련하여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됨.
 - 셋째, 농업보조금과 농산물 관세감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개도국의 특별품목의 처리문제가 남아 있음. 특히 미국은 개도국 농산물 시장의 실질적 개방을 위해 특별품목 수는 5개 관세라인 이하로 하며, 관세감축과 TRQ 설정 및 증량을 주장하고 있음. 반면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특별품목을 주장하고 있는 G33은 특별품목의 수로 관세라인의 20%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세감축률도 최대 10%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넷째, 비농산물 시장접근 그룹에서의 관세감축 계수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히 G20은 농업에서 미국이 무역왜곡보조금을 대폭 감축해야 개도국에게 적용될 계수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다섯째, 삼각 쟁점에 대한 주요 4개국의 이해절충이 최종적으로 다자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 G10의 입장도 부분적으로 반영되어야 가능함.

-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EU, 그리고 라미 사무총장은 삼각 쟁점에 관한 주요 4개국간 이해절충을 위해 브라질과 인도의 설득작업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됨.

3. 2007년 DDA 협상 전망

- 2007년 들어 DDA는 라미 사무총장을 축으로 미국과 EU, 브라질, 인도 등이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조용한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미국과 EU는 DDA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여타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음. UR 협상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미국, EU의 타협을 기초로 이들 주요국간의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DDA가 급물살을 탈수도 있기 때문임.
- 한편 개별 협상의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쟁점이 남아 있음. 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단시일내 DDA 타결을 낙관하기는 어려움.
- 또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시한과 주요국의 정치 일정도 DDA 전망의 고려 요인임. 미국의 TPA 종료가 2007년 6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연장 없이는 설령 DDA가 2007년에 타결된다고 해도 미국이 DDA 결과를 이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
 - EU의 추가적인 관세감축에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로 2007년 상반기 중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EU가 추가적인 융통성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또한 G20으로 대표되는 개도국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음. 미국과 EU가 주요 쟁점에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브라질과 인도 등의 양해를 얻지 못한다면 다자화하여 WTO 회원국의 의견일치(consensus)를 얻기는 어려움.
-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DDA 협상을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동시에 가능할 것임.
 - 낙관적 전망은 2007년 말(혹은 늦어도 2008년 초까지) DDA가 종결되는 것이고, 비관적 전

망은 2007년 프랑스 대선 이후 DDA가 본궤도에 진입하여 2008년을 지나(2008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음) 2009년 말에 가서야 DDA가 타결되는 경우임.

- 현 단계에서는 두 전망 모두 가능성이 있음.

1) 낙관적 전망

■ DDA의 낙관적 전망은 2007년 2월 중에 DDA가 전 분야에 걸쳐 공식 재개되고, 2007년 3월 말까지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을 합의·도출(아니면 최소한 삼각 쟁점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 4개국간 합의 도출)해냄으로써 2007년 말(또는 2008년 초)에 DDA가 종결된다는 전망이다.

- 낙관적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 여부임. 그러나 TPA의 연장을 위해서 적어도 2007년 4월 초까지는 DDA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며, 그것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함.

- 따라서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한 1차 관문은 2007년 4월 초까지 DDA의 세부원칙 도출(혹은 최소한 완벽한 형태의 세부원칙은 아니더라도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여부가 될 것임.

- 특히 최근 미국과 EU의 의견 접근과 라미 사무총장의 계속된 주요 4개국 접촉 등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재개된 DDA 협상이 부진할 경우 라미 사무총장 자신이 2007년 3월경에 직접 세부원칙 초안을 작성해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를 통해 주요국 각료들에 의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다면 2007년 4월 초 세부원칙 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2007년 4월 초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2007년 6월 말까지 세부원칙이 도출되는 경우도 가능할 것임).

■ 문제는 이러한 타협안이 합의되기 위해서는 주요국 각자가 DDA의 기대수준(level of ambition)을 낮추고, 기존 자신의 입장에서 일부 양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결의 지가 필요함.

- DDA를 다시 위기로 몰고 가 WTO 다자무역협상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의 기대 수준을 낮추어 이번 DDA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4개국의 절충안 마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만일 주요국 각료들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 2007년 3월 말이나 4월 초 세부원칙이 도출된다면 이는 곧바로 2007년 말 DDA 종결로 이어질 수 있음. 비록 국별 양허안 제출과 검증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과거 UR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말 또는 2008년 초 DDA 종결선언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비관적 전망

- 비관적 전망은 현재까지 진행된 DDA의 경험과 속도를 감안할 잔여 핵심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농업과 NAMA, 그리고 이러한 핵심 쟁점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2~3개월의 협상을 통해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함.
- 설령 2007년 3월경 라미 사무총장에 의한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주요국이 DDA 결과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지 않는 이상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봄.
- 따라서 비관적 전망은 2007년 4월 초 세부원칙 도출 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DDA는 200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TPA에 의해 2009년이나 경우에 따라서 2010년에 DDA가 타결된다는 것임(앞으로 최소한 2~3년 표류가 불가피).
- 실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DDA의 추이를 감안하면 비관적 전망이 앞의 낙관적인 전망보다 설득력 있고 객관적 전망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비관적 전망이 갖는 최대의 약점은 실제 DDA 타결이 2~3년 미루어질 경우 DDA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WTO에 의한 다자무역협상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WTO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점임.
- 이 경우 WTO 중심의 다자주의의 비효율성(예: 의사결정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반대급부로 FTA 등 양자간 무역자유화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임.
- 과연 WTO를 창설한 주요 선진국들이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DDA를 2~3년 지연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임. 다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추세를 감안할 때 DDA의 다자무역협상이 FTA에 버금갈 정도로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향후 WTO 다자무역협상과 FTA간의 괴리가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무역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보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이 있기는 함.

- 결국 현 단계에서는 낙관적, 비관적 전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특히 낙관적 전망이나 비관적 전망에 관계없이 2007년 3월 말 또는 4월 초가 향후 DDA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만은 확실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2개월간 집중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DDA 협상에 대비하여 주요 의제별로 예상 타결 방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정교한 협상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주요 4개국간의 핵심 쟁점을 놓고 정치적 이해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DDA 협상은 양자협상과 달리 논의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 소외되면 우리의 이해와 관계없이 협상이 타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